

“北 진정성 보이면 대화의 문 열려있다”

■안보·경제 분야

3일 진행된 이명박 대통령의 새해 특별 연설 화두는 ‘안보’와 ‘경제’로 요약된다. 우선 이 대통령은 지난 한 해 북한이 천안함 어뢰공격과 연평도 포격이라는 두 차례 ‘중대한 도발’을 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국가 안보전략의 획기적 재편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안보 = 생존권’이라는 점을 부각하면서 “튼튼한 안보에 토대를 둔 평화 정책과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미 폐기 단계에 들어간 ‘햇볕정책(포용정책)’ 대신 확고한 대북 억지력과 상호주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대북 정책을 확립하겠다는 변화의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북한 정권과 주민을 철저히 분리해 대응하는 기조를 통해 북한 내부의 변화를 유도하는 대북 정책을 더욱 가속화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남북간 ‘대화의 문’이 닫히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북한이 지금이라도 금강산 관광개 폐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일련의 과오를 사과하고 진정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공존을 원한다면 진정성을 보인다면 언제든 한 민족으로서 협력할 수 있다는 의지도 나타낸 것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정 운영의 한 축으로 제시했다.

일자리 창출, 복지 확충 등을 이루려면 지속적 경제 성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5%대 고성장 ▲3%대 물가 안정 ▲양질의 고용창출 및 서민과 중산층 생활 향상의 3대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종합 지원

北 도발엔 단호한 응징...행동으로 평화 노력

성장 5%·물가 3%·서민 생활향상 3대 목표

대책을 마련하고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양질의 시간제 근로직 정착,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선정, 공기업 이전 등의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미 FTA의 신속한 비준을 촉구하고 중국, 일본과의 FTA 체결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녹색성장

과 관련해서는 태양광을 ‘제2의 반도체’로,

풍력을 ‘제2의 조선’으로, 원자력 발전을 수출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국민 전체적으로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목표도 주요한 새해 국정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고령화와 양극화 추세에 대한 근본적인 비전이 삶의 질의 선진화”라면서 일자리, 교육, 복지, 문화, 생활체

육, 사회봉사, 안전을 융합하는 ‘종합적인 대책과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한정된 국가 재정으로 무차별적 시혜를 베풀고 환심을 사려는 복지 포퓰리즘은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맞춤형 복지’만이 적절한 해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밖에도 이 대통령은 지난해 G20 정상회의 개최를 언급하면서 현재의 청년 세대를 ‘G20 세대’로 명명했다. 이러한 G20 세대가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1인 또는 소수 창업 지원 강화 ▲대기업과 공기업 채용 증원 장려 ▲국제사회 파견 ▲교육 개혁 등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이명박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새해 국정운영 방향을 설명하는 신년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다시 한 번의 도약을 위해 온 국민이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연합뉴스

공공기관 157곳 내년말까지 이전

남해안권 물류관광벨트 25조 투입

■지역균형발전 가속

이명박 대통령은 3일 신년 특별연설에서 올해 중점 추진 사항으로 지역 균형 발전 및 특화 개발도 언급했다.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입지 선정, 공기업 이전, 5+2 광역경제권 조성 등의 국제 과제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또 동해안을 에너지·관광 벨트로, 서해안을 지식 첨단 융복합 벨트로, 남해안을 물류·관광 벨트로 특화하는 총 75조원 예산의 동·서·남해안권 발전 계획을 확정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들 과제 가운데 일부는 참여정부 때부터 추진됐음에도 세진행 속도가 지지부진했으나 국민과의 약속이고 지방 특화·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인 만큼 이 대통령이 이들 사업을 앞으로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우선 내년 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한 157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작업은 일부 기관 종사자들이 여전히 ‘실제 옮겨갈까’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음에도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

124곳은 10개 혁신도시, 17곳은 세종시로 옮겨가고 질병관리본부(충북 오송), 경찰종합학교(충남 아산) 등 16곳은 다른 지역으로 개별 이전한다.

이날 현재 이미 85개 기관이 이전 지역의 새청사 부지를 사들였고, 100곳은 청사 설계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 초까지 이들 지역의 이전 계획을 승인하고 장소를 확정하도록 관련 기관을 독려하는 한편 수시로 점검회의를 열어 각 기관의 이전 작업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국 10개 혁신도시 조성 및 세종시 건설 사업도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의 이전이나 공무원 등 종사자의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기초과학연구원을 설립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지난해 말 공포됨에 따라 소관 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는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의 입지 선정 작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부지 조성비를 제외하고도 3조5000억원이 투입되는 과학 벨트는 애초 세종시에 들어가는 방안이 유력했으나 세종시 수정안이 무산되고 원안이 확정되면서 여러 지자체가 나서서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전국을 기초·광역·초광역권으로 나눠 특화 개발하는 내용의 3차원 지역발전 전략도 본격화한다. 지식경제부는 시도 단위의 간막이를 없애고 전국을 5+2 광역경제권(수도권·충청권·호남권·대경권·동남권+강원권·제주권) 프로젝트 2009년부터 선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전국을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으로 나눠 특화 개발하는 초광역권 개발 방안도 지난해 5월 남해안권 종합개발계획이 확정된 데 이어 동해안권 및 서해안권 계획도 발표돼 올해부터 사업별 투자가 이뤄진다. 이들 3개 권역에는 2020년까지 25조원씩 무려 75조원이 투입되며 국토부는 내륙권 계획도 수립 중이다.

/연합뉴스

與 “선진 일류국가 도약 위한 성숙한 비전 제시”

野 “친서민 정책 언급은 국민 두번 우롱하는 것”

■정치권 반응

여야는 3일 이명박 대통령의 신년 특별연설에 대해 극명히 상반된 시각을 보였다.

한나라당은 이 대통령이 집권 4년차에서 성숙한 비전을 제시했다고 환영했으나, 민주당 등 야당은 경제·안보·복지 등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인식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올 한해를 선진 일류국가 도약의 발판으로 삼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해 국정에 매진하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밝힌 것”이라며 “다함께 잘 사는 국민’으로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미래를 만들고,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온 국민의 단합된 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육임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경제성장의 혜택이 서민에게 골고루 나눠지기 위해서

는 정부 차원의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대통령 스스로 상기한 것”이라면서 “안보에 선거를 한 해 앞둔 2012년 결정적 전환점이 생길 가능성이 높으므로 철저한 국방·안보태세와 평화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남북 대화의 문과 평화의 문을 열어놓은 것은 의미가 있지만 국민의 안보불안을 불식시키는 데는 역부족”이라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구체적인 제안을 필요로 있다”고 밝혔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국민의 생활을 무시하고 한반도 평화를 저버리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 복지와 일자리 문제에서는 너무나 동떨어진 의식을 갖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친서민 정책을 반복하는 것은 국민을 두 번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복지·사회 분야

이명박 대통령이 새해 국정운영 기조로 밝힌 ‘맞춤형 복지’는 그간의 친서민 정책을 진화시켜 인생 100세 시대를 대비해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을 펼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TV를 통해 전국에 생방송된 새해연설을 통해 “정부는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맞춤형 복지로 촘촘히 혜택을 드리는 것을 우선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며 맞춤형 복지 기조를 강조했다.

맞춤형 복지정책은 지난해 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대통령에 보고한 업무계획에도 잘 나타나 있다.

지속가능한 ‘맞춤형 복지’로 100세 시대 대비

복지부는 앞서 적극적으로 탈빈곤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면서도 양적확대와 기반구축보다는 내실화와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2012년까지 탈빈곤 집중지원 대상을 15만명 추가해 19만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위기에 빠진 ‘우선돌봄 차상위가구’를 100만가구 발굴해 민간 자원이나 일자리 등으로 연계하는 사업을 펼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정부는 서민희망 3대 예산

을 올해 핵심과제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정부의 예산편성도 이 같은 기조가 반영됐다.

정부는 앞서 보육과 전문계고교, 다문화가족 지원 등 서민희망 3대 핵심과제의 올해 예산을 작년보다 33.4% 증가한 3조7천209원으로 제시한 바 있다.

나아가 ‘맞춤형 복지’는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 대통령은 “한정된 국가재정으로 무차별적 시혜를 베풀고 환심을 사려는 복지

포퓰리즘은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다”며 “많은 나라의 예가 보여주듯이 복지 포퓰리즘은 재정위기를 초래해 국가의 정래는 물론 복지 그 자체를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제 인생 100세를 기준으로 사는 시대로 접어들었다”며 “모든 국가 정책의 틀도 이에 맞춰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한 데서 고령화 시대에 대비, 지속가능한 복지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는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연합뉴스

도민 여러분,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를 막아내어 전남을 친환경 청정 축산물 생산 1번지로 만들어갑시다.

구제역이 경북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충남과 전북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까지 발생하여 자칫 방역에 소홀할 경우 축산업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되므로 축산농가를 비롯하여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는 효과적인 치료제가 없으므로 예방이 최선입니다. 축산농가에서는 축사를 매일소독하고, 자신의 농장은 자신이 지킨다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마을 입구에 생석회 살포 등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축이 스스로 면역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사육밀도를 준수하고 운동장 확보 등 친환경적인 사육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 도내 주요도로에 설치된 방역초소 운영으로 일상에 다소 불편하시겠지만 우리 전남이 친환경 청정 축산물생산의 1번지가 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들께서 방역소독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